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배우고 느낀 것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선전부국장

필자는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FIET-KLC가 주관한 스웨덴
사회복지연수프로그램에 참가
했다. 연수단은 보건의료노조,
공익노련 등에서 일하는 노조
간부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일간 스웨덴을 다녀왔다. 그 2주일일은 우리나라에서 살던 생활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세계에 갔다 온 느낌 때문에 다녀온 뒤에도 한동안은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1달이 지나니 그때 그렇게 또렷하던 느낌과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희미해져간다. 그러자 슬그머니 걱정이 됐다. 스웨덴에서 머무르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신선한 느낌들, 싹터오르던 희망들, 새록새록 돌아나던 새로운 각오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실 앞에서 새로운 활동으로 꽃피지 못한 채 파묻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그 기억을 살려놓기 위해 '스웨덴 연수 일기'를 썼다. 2주일간의 일정 속에서 배운 것, 느낀 것,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을 매일같이 기록해뒀는데 그것을 다시 정리하여 A4 용지 22장짜리 일기문을 만들어냈다. 아주 생생하게 썼는데 잊을 만하다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보면 그때 그 느낌을 생생하게 다시 새겨볼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꽤 흡족하고 마음이 놓였다. 다행히 그 글을 읽어본 동지들은 "한번 가보고 싶다" "마치 스웨덴에 갔다온 것처럼 생생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고



스톡홀름에 있는 스웨덴 노총이 본부 건물로 활용 중

평가해줬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허전했다. 더 알기 위해 스웨덴에 대해 공부할 더해보겠던 결심은 많은 업무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스웨덴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현실과 새롭게 접목해보자던 모색과 고민들은 부닥친 현안문제 해결하느라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채 묶어두어야만

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손실인가!

그래서 배우고 느꼈던 것, 그리고 고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로 했다.

빛속에서부터 무덤까지

내가 2주일간 스웨덴에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연맹이 국제상업사무기술

전문노련 한국연락위원회 (FIET-KLC)가 주관하고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연구소와 한델스노조(상업노조)가 후원한 '스웨덴 사회 복지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배려해주었기 때문이다.

사실 스웨덴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스웨덴은 복지국가'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아무 것도 몰랐다. 스웨덴에 가기 전에 스웨덴 사회와 복지체도를 학습하고 가서 배우고 나니까 그제서야 '복지국가'의 실체가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① 육아와 교육

스웨덴에서는 아이를 가지면 지역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담당간호원도 배치하고 상담도 해주고 채조 등 출산교육도 해주며 출장간호까지 해준다. 아이를 낳으면 분만수당을 주고 키우면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탁아소는 공립이며 1살이 넘으면 탁아소에 맡길 수 있다. 육아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시정부 의무사항으로 돼 있다. 분만휴가는 1년이며 남자 쪽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 분만휴가기간 동안 받는 임금은 일할 때 받는 임금의 90% 정도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교육비는 무료이며 교재와 기자재까지 모두 무료이다. 아무런 담보 없이도 썬 이

사민당은 당선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의원후보 50%를 무조건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렇다 보니 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매우 높다. 장관 가운데는 여성장관이 더 많다. 노조가운데 여성간부도 많다.

자로 음자를 받아 주택을 살 수 있다. 주택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② 남녀평등

남녀평등 수준은 그 사회의 평등과 진보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는데 스웨덴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율이 88%나 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직장에서는 보육시설 설치, 여성탈의실 설치, 차별대우 금지, 성희롱 금지 등을 사용자 의무사항으로 정해 놓고 이것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한다. 1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남녀비율을 보고해야 하고 평등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민당은 당선가능성과는 관계없이 의원후보 50%를 무조건 여성에게 할당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렇다 보니 의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매우 높다. 장관 가운데는 여성장관이 더 많다. 노조가운데 여성간부도 많다.

③ 의료와 산재

노년층도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노년층의 76%가 계속 일하고 있다. 보건의료복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고 할 정도로 완벽에 가깝다. 23개 주로 나뉘어져 있는 행정조직이 보건의료를 완전히 책임진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

지만 질병에 걸리더라도 20세까지는 완전히 무료이며 치과도 완전무료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간호, 청소까지 제공해주며 미용을 위한 성형을 제외하고는 암을 비롯해 모든 질병을 무료로 치료해준다. 질병에 걸리면 급여의 80% 정도 되는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원인과 관계없이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재해와 질병은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1년 이상 아픈 장기환자는 급여의 80%에다 20%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급여의 100%를 질병급여로 받는다.

④ 실직수당과 연금

실업자는 실직한 뒤 300일 동안 1일 소득의 80% 정도를 실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57세가 넘는 실업자는 450일 동안 받는다. 300일치 받는 동안 일을 하면 그 기간만큼 실업지급기간도 추가된다. 자영업자도 문닫으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번 소득에 비례해서 실업수당을 받는다. 출산휴가를 비롯해 휴가기간도 고용기간으로 간주해서 실업수당을 매긴다.

연금으로는 65세가 되면 누구나 받는 기초연금, 소득에 비례하여 받는 소득비례연금,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얻어낸 연금 등이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합치면 소득의 65%에 이르고, 단체협약을 통해 얻어낸 연금(소득의 11%)까지 합치면 소득의 76%에 이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⑤ 세금

이 정도니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면 스웨덴은 '벋속에서 무덤까지' 라고 할 만하다. 물론 스웨덴 복지제도가 맨땅 위에 저절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국민들은 지방세 30%, 부가세 12~18%에다 사회보험기금까지 모두 포함해 소득의 55%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 자본소득에는 무조건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개인주택을 매매할 경우 이익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의 33% 정도를 사회보장기부금으로 납부하며 자영업자는 기업운영에 따른 순수소득의 31%를 사회보장기부금으로 납부한다. 과세특례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나" 하겠지만 스웨덴 복지제도는 세금을 기본재원으로 하여 누구나 아주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탈세는 드물지만 최악의 최악으로 치부되고 있다.

복지는 포기할 수 없는 '사회권'

한마디로 새로웠던 것은 스웨덴에서 사회복지가 이념이자 문화이며 철학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는

사실 성장의 떡고물이었거나 아니면 빈곤과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에 지나지 않았지만 스웨덴에서 사회복지의 스웨덴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스웨덴은 경제권(경제민주주의), 정치권(정치민주주의)과 함께 '사회권'(복지권)을 강

조하고 있다. 복지를 제도화하고 사회평등주의 이념에 뿌리내린 사회복지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철학과 관점이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스웨덴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기본철학이 있었기 때문일까?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1/3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확대돼 있었다.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스웨덴은 완전고용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공공부문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확대정책을 폈다고 한다.

스웨덴이라고 해서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년대 경제불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 OECD 나라들이 경

스웨덴은 "완전고용과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경제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노동자의 1/3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확대 있었다.

제축소정책을 펴면서 복지를 축소하고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구조조정을 강행했지만 스웨덴은 복지국가정책을 유지했다. 재정적자가 생겼지만 경제확대정책을 펴면서 긴축과 싸웠다. 스웨덴은 이러한 복지국가정책, 경제확대정책이 고용안정과 경제회생을 가져왔다고 확신하고 있다. 복지확

대정책과 경제확대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업자가 적었고, 실업보험금도 줄 수 있었는데 이것이 구매력을 갖게 해 경제를 회복하는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어느 노동운동 전문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했기 때문에 고용사정이 좋아졌다고 떠벌리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이라고 혹평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80년대와 90년대 사이에 고용상태가 좋아진 것은 경제확대정책을 폈기 때문"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고관리정책을 펴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쫓는 김대중정부와 IMF의 처방전과는 사뭇 다르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스웨덴이 구조조정과 담쌓고 지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펼친다. 중요한 것은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그 뒤에 따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의 전경.

는 고용보장문제, 산업구조변화문제, 새로운 일자리만들기문제, 노동자 교육훈련문제 등을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재정적자를 가져왔지만 스웨덴은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완전고용일 경우 재정적자는 문제가 안된다. 그 경제는 강하다"는 것이 스웨덴의 기본관점이다. 사실 그것은 증명됐다. 80년대 스웨덴 고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비율도 최고수준이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스웨덴은 스스로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웨덴은 경제회생을 위해 복지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를 잘 갖추는 것이 경제회생의 밑바탕이라는 것, 복지정책을 확고하게 펴는 것이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본정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두 기둥 : 노동운동과 정당

스웨덴 복지제도는 노동운동과 밀려야 낼 수 없다. 노동운동이 핵심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짧은 기간이

었지만 스웨덴에서 생활하면서 노동운동은 단지 스웨덴 사회의 외곽이나 일부만이 아니라 핵심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① 스웨덴의 노동조합들

스웨덴 노조들은 크게 3개의 노총으로 조직돼 있다. 221만명(여성 46%)의 조합원을 가진 LO는 주로 블루칼라 노동자 중심인데 금속노동자, 상업노동자가 여기에 포괄돼 있다. 130만명(여성 54%)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TCO는 화이트칼라 노동자 중심인데 간호사, 교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다. 39만명(여성 46%)의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SACO는 대학 졸업 전문직으로서 교수, 강사, 의사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 같은 교직이면서도 일반교사들은 TCO에 가입해 있고, 대학 교수와 강사들은 SACO에 조직돼 있는 것이 특이하고, 같은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의사는 SACO에, 간호사와 의료기사와 조산사는 TCO에, 사무행정·시설·기능직은 LO에 가입돼 있는 것이 특이하다. 역사도 길다.

LO는 1898년에 창립됐고 TCO는 1944년에 창립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SACO는 1947년에 창립됐다. 조직률도 높다.

LO의 가입률은 85%에 이른다. 남자

우리나라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SAF 건물은 LO 건물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사무실 한층 또는 한칸을 임대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연맹조직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는 83.7%, 여자는 86.4%로 여성이 더 많이 조직돼 있다. 간호사노조 스톡홀름 지역본부의 경우 조합원이 무려 96%나 됐다.

노조활동을 보면 3,400명의 조합원이 일하고 있는 LO산하 스캐니아자동차지부 벽스타스크지회의 경우 전임위원이 12명이고 이들의 임금과 필요한 용품, 해

외여행경비, 회의비까지 모두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힘이 막강하다. 집행부서는 방위계 담당, 조직담당, 지역담당, 기업경영담당, 교섭담당, 보험담당, 홍보담당, 교육담당, 조사연구담당, 대외협력담당, 조직강화담당, 평등담당 등 아주 세분화되고 활동영역이 넓었다. 간호사노조 스톡홀름지역본부의 경우 조합원이 3만 명인데 대의원이 1,600명이나 될 정도로 조직활동도 활발했다.

스웨덴 노동운동이 얼마나 위력적이고 힘이 있는지, 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각 조직의 사무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스톡홀름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LO 사무실은 하나의 큰 빌딩이다. 다른 조직들, 각 노조들의 스톡홀름지역본부 사무실도 LO 건물만했다. 우리나라 시내 중앙이 각 재벌그룹들과 대기업들의 본관건물이 늘어진 것처럼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내 중심가에 각 노조조직들의 사무실이 자리잡고 있

었다. 우리나라 전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SAF 건물은 LO 건물에 비하면 초라할 정도였다. 사무실 한층 또는 한칸을 임대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 민주노총이나 연맹조직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 실제로 스웨덴 복지제도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결과였다.

②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스웨덴 노동운동은 완전고용과 노조운동 강화를 위해 '연대임금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을 펴왔다. 연대임금정책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목표로 했는데 ① 임금이 하향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일정수준의 기본을 유지하는 것, ② 임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 산업별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이로써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동자 내부의 격차와 불평등, 분열을 뛰어넘어 평등과 연대라는 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대임금정책으로 스웨덴 노동운동은 노조 조직율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연대임금정책을 펴다 보니 고임금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은 상향평준화되었고, 일정한 임금수준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되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

기 때문이다.

'고임금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전체 노동자들의 평등과 연대, 이것을 강력하게 추구했기 때문에 스웨덴노조운동은 저임금 중소기업 노동자, 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들까지 노동조합으로 끌어 들일 수 있었고 강력해질 수 있었고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었다. 기업별노조의 벽을 깨는 것, 연대와 평등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완전고용과 생활안정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것으로서 ① 빈자리 채우기 ②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③ 새로운 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교육·훈련하기 장애인 보호 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자리가 생기면 곧바로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하고, 광범한 정보망을 형성해 곧바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 기술, 컨설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국가 차원에서 직업재훈련과 교육, 의료보장, 노인보장 등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③ 노조의 실업부담금 관리와 정책역량

한편 스웨덴에서 가장 독특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보험기금을 노조가 관리하고 있다보니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노조가입은 꾸준히 늘어났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 노동자 420만명 가운데 380만명이 실업보험 기금에 가입해 있다. 이러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스웨덴 노조들은 사민당과 힘을 합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스웨덴은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동자와 국민들은 고용안정, 생활안정을 누리고 있다.

부러웠던 점은 스웨덴 노조에는 전문 가입단들이 대거 포진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가정책과 사회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정책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웨덴 노조는 정치권과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사민당에 아이디어를 전달한다. 그리고 의회에 동맹군을 만드는 등 정치적 파트너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강력한 노조, 사민당의 장기집권, 노조와 사민당의 굳건한 결속 등이 바로 스웨덴 복지제도를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동운동과 정당이 결합하여 복지국가를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스웨덴 복지국가를 보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바 산별노조 건설과 정치세력화의 두 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새록새록 느껴졌다.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사민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은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평등주의(Egalitarianism), 그리고 계급을 초월한 전국민적 연대(Solidarity)라는 세 가지 이념에 뿌리내리고 있다.

스웨덴 노동운동의 이념과 노선 :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복지제도는 스웨덴 사회를 '민중의 가정'으로 만들겠다는 이념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이념 아래 스웨덴은 경제가 어려울 때에도 완전고용과 평등, 사회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스웨덴의 노동운동과 사민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노선은 '사회민주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평등주의(Egalitarianism), 그리고 계급을 초월한 전국민적 연대(Solidarity)라는 세 가지 이념에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스웨덴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 낮은 실업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평등, 누구에게나 골고루 미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제도 등등, 최고수준의 복지국가로 현실화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가 복지국가로 꽃피어나는 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조합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연대입금징계를 통해 노동자 내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구하고, 사민당은 때로는 농민당과 때로는 공산당과 계급연합, 정책연합을 통해 정권을 잡고 정책



한국연수단이 스웨덴인 호시노 조 부부를 방문했다(왼편 왼쪽이 필자).

을 실현해나갔다. 노동과 자본과 국가는 서로 이해와 협상, 토론과 타협, 조정과 연대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조건 자체가 다르다. 우리 현재 모습을 돌아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있는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를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컵대기 기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역사가 길고 조직력이 강한 노조, 정권을 잡은 사민당,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본가. 스웨덴은 이런 조건이 있었기에 사회적 조합주의가 발달했고 사회민주주의가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었다.

사회적 조합주의는 시민사회 곳곳에도

뿌리깊이 박혀있다. 스웨덴은 교회조직이 발달해있고 노조조직이 발달해있고, 옴부즈맨제도가 발달해 있는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토론문화, 타협문화, 민주적 훈련, 시민연대, 시민문화가 본분하게 자리잡고 있다. 하나의 정책을 입안할 때에도 강제로 밀어 부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한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위엄'이나 '관료주의'를 부리지 않고 문턱이 없고 겸손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것, 부정부패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이런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운동이 그 동안 쌓아온 도덕성, 연대성, 진보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들 속에서 새로운 시민·사회·문화운동을 강력하게 일구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스웨덴 노동운동의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노선이 무엇인가를 고민해보게 됐다.

현재 이 지구상에 진보의 실체는 어디에 살아있는가? 많은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의 길을 걸었고, 자

본주의국가들은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카지노 자본들에 농락당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안정된 삶과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나라, 진보의 실체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닌가?

비록 100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운동과 10년을 갓 넘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똑같이 놓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이념과 노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안사회는 무엇인가? 역사와 전통, 사회적 조건, 사회세력의 성장정도, 주변국제정세 등이 그야말로 판이한 우리나라는 어떤 경로를 밟아서 복지국가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복지국가가 아니라라도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분명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 맞는 길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3세계 국가들은 빈곤과 불평등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 비교해볼 때 스웨덴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안정된 삶과 희망을 제공해주고 있는 나라, 진보의 실체가 살아있는 나라가 아닌가?

들었다.

노동운동이 이념과 노선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 어디까지 진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도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태까지 이념과 노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무슨 사상이니 주의니 내걸기만 하면 정권과 자본은 초

도화를 시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우리 노동운동의 발전수준도 사회운동으로 성숙되지 못한 채 사업장 활동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노동운동의 노선과 목표는 '노동해방'이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등 아주 추상적이었다.

정책도 전술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고용안정, 사회개혁을 내세웠지만 정리해고제를 철폐해야 할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할지 또는 재벌해체인지 재벌규제강화인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혼란스러웠다. 추상적이다 보니 구체적인 방침과 전술이 뚜렷하지 못했으며, 이렇게 모호하고 혼란스럽다보니 투쟁전선·연대전선이 약화됐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념과 노선을 분명히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기업별노동조합들의 벽을 뛰어넘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차원을 뛰어넘고 기업차원의 복지제도 개선이라는 벽을 뛰어넘어야만 하는 현재의 요구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 내부에서부터라도 이념과 노선을 정립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과 포용력있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념과 노선을 이야기하면 아예 머리부터 가로질고 보거나, 분파로 몰아버리는 풍토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고 이념적·제도적 지평을 넓혀나갈 수 있는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노동운동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새로운 사회모델에 대한 고민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과 방침을 구체화시켜나가기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성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는 것

스웨덴에서 보고 느낀 것 가운데 인상 깊은 것 중 하나는 강의실마다 언제든지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OHP 필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가 완벽하게 마련돼 있었고 노우트와 볼펜도 준비돼 있었다. 마이크와 칠판(블랙보드, 패드)도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뒤에는 사탕, 커피, 과일(사과, 배, 바나나), 주스, 물, 빵 등이 준비돼 있었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노조활동이 그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조의 전문역량도 매우 강화돼 있었다. 노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이 사회정책, 경제정책,

가족정책, 물가정책, 국제연대정책 등 각 분야 정책을 연구·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교수, 학자 등 좁은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드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여러 분야를 골고루 알고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노조운동가의 경험을 결합하여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착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운동에서 정책생산력은 얼마나 취약한가?

세부적으로 파고들어보면 거의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과 연계를 갖고 토론회·공청회를 활성화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 정책생산단위를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 학계를 비롯해 전문가역량과 결합해야 하고, 전문역량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적 투자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당면 현안에 바쁘게 돌아칠 줄만 알았지 사람에 대해 투자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던가?

또 한가지 놀라운 것은 스웨덴 노동운동이 국제연대활동을 매우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점이다. 올로프 팔메센터는 노조, 정치조직, 합동조합조직, 노동자교육센터 등 33개 조직의 연대조직으로서 인권, 평화, 군축, 사회복지,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1년에 27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엄청난 사실이다. 국제화시대에 국제연대도 그냥 지나쳐볼 문제는 아니다.

자본이 세계화 국제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전세계 노동운동의 연대,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세력간의 연대는 얼마나 중요한가? 유람성 연수다녀 오고, 국제회의에 얼굴 내밀고, 활동지원금 받아내는 국제연대에서 벗어나 공통의 사안에 대한 연대, 전세계적 진보 민주세력간 연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활동이 필요하다.

시각을 넓히고 활동을 깊이면 틈새가 보인다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를 직접 보고 나니 세상이 달라보인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새로운 감동을 느꼈다.”

이것이 스웨덴 연수를 다녀온 우리 일행들이 똑같이 느낀 가장 중요한 충격이었다. 사회복지지는 단순히 ‘좋은 것’ ‘선진복지국가에 있는 것’으로 막연히 느끼던 것에서 현실사회에 구현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전망을 갖고 투쟁을 통해 쟁취하고 확보해나가야 하는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사실 지금 IMF상황에서 인력이 감축되고 임금이 삭감되는 등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복지지는 제기할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여지 또한 많이 생기지 않았는가? 비록 스웨덴만큼 노동운동세력이

보수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이들 위원회를 민주화시켜내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강력하지는 못하더라도 틈새를 파고들면서 제기하고 투쟁을 조직하면 얼마든지 사회복지지를 개척해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이 기업복지에 머물렀던 시각을 사회복지 쪽으로 돌리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정책력과 정치력을 키우는 일이 필요하다. 보수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노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이들 위원회를 민주화시켜내고, 운영을 민주적으로 개조하는 일에 착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단지 노동운동에 쏟아지는 ‘집단지기주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양념으로 사회개혁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노동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함께 걸려있는 공동사안인 사회복지를 쟁취하기 위해 국민적 이슈를 개발하고 국민적 운동형태를 개척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LO, 그리고 사민당이 집권하여 정책을 펴고 있는 스웨덴과 우리나라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스웨덴 모델이 갖고 있는 내용을 우리나라에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첫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가 이념이자 철학이며 문화이

자 정책으로 정착돼 있는 스웨덴과는 다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아래로부터 사회복지투쟁·사회복지운동을 강력하게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운동도 이제는 알맹이 없이 원칙론에 그치거나, 부정일변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복 대안을 마련하고 비록 역량이 미약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정책연합이라든지, 사회시민단체들과 연대한다든지, 정교한 상층 정치작업을 펼친다든지, 국민적 이혼작업과 대중운동을 주장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실현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노조의 정책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

역주민활동, 대시민활동으로 노조활동의 폭을 넓혀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내실화하고 각종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정책활동을 강화하는 일, 시민여론조사활동을 벌이는 일, 지역조사활동을 펼치는 일, 국민대중과 함께 하는 새로운 대중운동영역을 개척하는 일,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여 제도개선투쟁의 틈새를 찾아나가는 일에 이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열린 시간, 깊이 있는 활동을 통해 이제 우리 노동운동의 새로운 영역,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것” 이것이 스웨덴 인수를 통해 배운 값진 교훈이다. ❖

